

동향과 분석

북한의 대외무역: 2015년 평가 및 2016년 전망
이종규

2015년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양문수

2015년 북한실물과 산업동향 평가 및 전망
이석기

2015년 북한 곡물생산 동향과 향후 전망
김영훈

2015년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msyang@kyungnam.ac.kr

I. 머리말

북한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함에 있어서 시장화(또는 비공식경제, 사경제)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 위기 이전에 시장은 매우 제한적이고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어느덧 북한경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 특히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서는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더욱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장화는 최근 북중무역과 함께, 북한경제를 끌고 가는 2대 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의 시장화가 2015년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러한 움직임이 북한경제에 던지는 함의는 무엇인지, 또한 시장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책은 어떠한지, 시장화 동향과 정부 정책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2015년 북한 시장화 동향을 정리·평가하고, 간단한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시장화 동향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외부 세계가 입수 가능한 정보와 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공식 매체들은 시장화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와 관련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른바 대북 소식지¹⁾라 하여 북한 관련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내외 언론에 일차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성과 대표성 등의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사전적으로 충분히 인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1) 『자유아시아방송』, 『데일리NK』 등.

대북 소식지와 함께 김정은 신년사 등 북한의 공식매체와 『조선신보』를 일부 활용하기로 한다.

한편, 북한의 시장화를 논함에 있어서 종종 간과하는 것이 사유화 문제이다. 특히 북한의 시장화를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적 소유권 불변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생산수단의 실질적인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소규모 사유화이지만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장화가 다시 한 번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사유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유화 문제까지 시야에 넣어야만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보다 객관적·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시장화 동향과 함께 사유화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시장화의 동향

1. 종합시장 및 관련 소비재 시장의 확대

북한에서 소비재시장의 확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종합시장의 확대이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Curtis Melvin) 연구원에 따르면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에서 운영하는 공식시장이 2015년 10월 현재 40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 시장은 건물이 있으며 북한정부의 책임 아래 주민들이 자릿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2010년 위성사진 분석 당시 확인된 공식 시장은 200여 개로, 5년 만에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평안남도 안주시의 남흥시장, 강원도 원산시의 갈마시장, 세길시장을 비롯해 평안북도 대관군, 함경남도 개천 등에도 새로운 시장이 들어섰다. 북한정부가 김정은 시대 개막 이후에도 종합시장의 건설·확장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²⁾

또한 열흘에 한 번씩, 한 달에 세 번만 열리게 되어 있던 북한의 군(郡) 단위급 농민시장이 연중무휴인 상설 장마당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당국의 허가에 의해 확대된 시점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데 빠른 곳은 2014년 여름부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써 한 달에 3번만 열리는 기존의 농민시장은 농촌의 리 단위 이하 시골에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³⁾

2) 『자유아시아방송』(2015. 10. 24).

3) 『자유아시아방송』(2015. 5. 28).

그리고 종합시장 매대(좌판) 수와 상인 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데일리 NK』의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직접 시장 매대 수를 세어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종합시장의 매대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혜산 농민시장의 경우, 2012년 말 매대 수가 3,600여 개였는데 2015년 3월 현재 4,000여 개로 400개나 늘었다. 또한 같은 기간 혜산시 연봉시장 매대 수가 755개에서 1,047개로, 위연시장은 879개에서 1,124개로, 연풍시장은 392개에서 744개로 크게 늘었다.⁴⁾ 또한 북한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이기도 한 청진 수남시장은 매대 수가 3년 전보다 수천 개 늘어난 1만 2천여 개에 달했다.⁵⁾

그 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 주민들 속에서 종합시장 매대를 구입하려는 일반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미 매대 상업을 통해 돈을 번 주민들 중에는 매대 장사보다 편하고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장사로 옮기기 위해 매대를 팔려고 내놓는 경우가 있다. 혜산 농민시장의 경우, 매대 한 개당 가격이 1,800위안에서 4,500위안으로 북한돈으로 하면 235만원에서 590만원 수준이다. 결코 싸지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종전에는 매대를 팔려고 해도 쉽지 않았다. 당국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다 비싼 돈을 주고 매대를 사더라도 장사가 그만큼 잘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져 매대를 내놓기가 무섭게 금방 팔려 나간다고 한다. 당국의 단속도 거의 없는데다 매대 장사가 그만큼 잘된다는 것이다.

특히 장사가 잘되는 상품의 매대를 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위치가 좋은 매대는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매대 값을 비싸게 불러도 빠르게 팔린다고 한다. 음식이나 쌀 매대 등은 돈을 별로 벌지 못하지만 천이나 가전제품, 잡화 등 공업품(공산품) 매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을 주고서라도 인기 있는 매대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것이다.⁶⁾

시장화의 진전으로 종합시장 매대뿐 아니라 여타의 매대들도 늘고 있다.⁷⁾ 집 매대의 경우, 최근에는 집을 개조하거나 증축해 살림집 한 칸을 매대로 만들어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각종 가전제품과 식료품, 생필품 등을 주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리의 노점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막 매대’ 또한 크게 늘고 있다. 평안남도의 몇 개 동(洞)의 경우, 시장을 주변으로 2km 정도에 이런 막 매대가 줄지어

4) 이처럼 혜산시의 거의 모든 시장의 매대 수가 대폭 증가한데 반해 혜산광산이 위치해 배급과 공급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마산 시장은 같은 기간 700개에서 712개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5) 『데일리 NK』(2015. 1. 30; 2015. 3. 11).
6) 『데일리 NK』(2015. 5. 12; 2015. 5. 15).
7) 북한에서 매대는 보통 종합시장 매대, 도로나 길가에 있는 편의봉사망 매대, 국영상점 매대, 집 매대로 나뉜다.
8) 『데일리 NK』(2015. 1. 22).

있을 정도이다. 이런 ‘막 매대’는 주민들이 이동하면서 잠깐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국수나 인조고기밥, 온반 등을 주로 취급한다. 또한 낮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밤에만 나와 술장사를 하는, 우리의 포장마차와 비슷한 곳도 늘어나고 있다.⁹⁾

2. 새로운 소비재/서비스 시장의 등장과 확대

시장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상품, 새로운 소비재/서비스 시장이 등장, 발달하고 있다.

2015년 심각한 가뭄으로 평양 시내 수도물 공급이 여러 달째 완전히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식수대란을 겪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 인근 강물을 퍼다 파는 이른바 ‘물장수’들도 등장했다.¹⁰⁾ 최근에는 식료품, 생필품 가내 수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그 여파로 연탄 시장도 발달하고 있다. 즉, 집안에서 술과 과자, 신발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료로 구멍탄(구공탄)이 필요한데, 종합시장에서 구멍탄을 찾는 수공업자들이 많아지자 구공탄을 집에서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것이다.¹¹⁾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액화석유가스(LPG) 시장이다. 북한 주민들의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석탄, 땀감, 석유가 암시장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액화석유가스(LPG)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땀감 부족에 시달리던 북한 주민들 사이에 ‘천마’ 상표의 액화석유가스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는 것이다.¹²⁾

평양 시민들에 대한 국가 가스공급이 중단돼 가스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지만, 최근 돈주들과 개인들은 개인업자들로부터 가스를 구입해 가스콘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서평양 국가 가스공급소 창고에는 가스통이 많진 않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집(개인 창고)에는 국산 가스, 중국 가스 등 다양한 가격의 가스통들이 꼭 차 넘친다고 한다. 평북 백마군에 위치한 봉화화학공장에서 생산된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는 기차를 통해 남흥청년화학공장과 평양시로 유통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시장으로 유출되어 빼돌려져 전국으로 유통된다.¹³⁾

만성적인 전력난 속에서 주민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태양 열판(혹은 태양 전지판)이다. 집 지붕에 설치한 태양 전지판을 사용한 가정 내 자체 전기 생산은 2010년대부터 크게 늘고 있다. 태양 전지판은 이제 웬만한 가정에서는 ‘재산목록 1호’가 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주민들은 정전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전기공급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주민 스스로

9) 『데일리 NK』(2015. 7. 22).

10) 『자유아시아방송』(2015. 1. 22).

11) 『데일리 NK』(2015. 1. 30).

12) 『자유아시아방송』(2015. 5. 29).

13) 『데일리 NK』(2015. 6. 24).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이 문제를 이제는 중국산 태양 열판이 해결해 주고 있다. 태양 열판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개인 주택 조명은 물론 TV, 노트북(CD 재생기), 냉장기(고), 선풍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다.¹⁴⁾

이와 함께 북한에 승용차가 늘면서 세차업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계 세차장과 손 세차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차 세차장은 몇 년 전만 해도 힘이 있는 외화벌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했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돈주들도 뛰어들고 있다. 외화벌이 회사는 외국제 설비로 기계 세차장을 운영하지만 최근 돈주들은 손 세차장으로 차별화하고 있다고 한다.¹⁵⁾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 보유 증가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주유소도 늘고 있다. 평양과 원산, 개성을 잇는 고속도로 옆에 원유 판매소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평양-신의주 간 일반 국도 옆에도 원유 판매소들이 줄줄이 들어섰다고 전해진다. 이제 2000년 대처럼 도람(드럼통)으로 휘발유를 팔던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다. 최근에는 군부 소속 무역회사들이 입지적 조건이 좋은 장소마다 주유소를 설치하고 전국적인 판매망을 형성하고 있다.¹⁶⁾

최근 북한에도 전용 예식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청진시에도 매 구역¹⁷⁾에 보통 3~4개 정도의 예식장이 있으며, 예식장에서는 결혼식뿐만 아니라 회갑잔치와 돌잔치도 할 수 있고 직장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뷔페식 식당까지 겸하고 있다. 또한 평양 시내 결혼 전문 식당들도 호황을 맞고 있다. 경흥관을 비롯한 결혼 전문 식당에서는 100명 기준으로 예약을 받는데, 음식은 한 사람당 5달러씩 계산하고 가짓수는 7~8가지로 해주는데 음식도 맛있고 양도 괜찮게 나온다고 한다. 이처럼 결혼 전문 식당 수요가 많아지자, 일부 편의봉사 기관들은 식당을 결혼식장으로 개조하는 등 돈벌이에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¹⁸⁾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예식문화도 바뀌고 있는 것이다. 종전에는 결혼식과 돌, 회갑 잔치 등을 집에서 힘들게 음식을 마련해서 치렀으나, 이제는 새로 등장한 예식장에서 간편하고 화려하게 치르고 있다.¹⁹⁾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김장인데 최근엔 북한 주민들도 김장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의 겨울은 춥고 긴데다 채소를 구하기 어려워 김장철만 되면 북한 주민들은 김치를 최대한 많이 담그곤 했다. 하지만 요즘엔 겨울철에도 돈만 있으면 배추나 무를 장마당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미련할 정도로 김장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농촌 주민들이 겨울철에도 개인 폐기밭에서 재배한 배추나

14) 『데일리 NK』(2015. 10. 19).
15) 『데일리 NK』(2015. 9. 18).
16) 『자유아시아방송』(2015. 11. 5).
17) 북한의 구역은 대도시에만 있는데 우리의 구에 해당된다.
18) 『자유아시아방송』(2015. 9. 23).
19) 『데일리 NK』(2015. 12. 22).

무를 내다 팔고, 더욱이 겨울에도 ‘비닐박막 온실(비닐하우스)’을 지어서 오이나 가지를 재배해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이 꽤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 단위까지 상설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김장 풍속도까지 변화하고 있다.²⁰⁾

3. 부동산시장의 확대

최근 북한 시장 중에서 가장 활기를 띠는 곳의 하나가 부동산시장, 특히 신축 아파트 시장이다. 2014년 7, 8월경부터 신의주 채하동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원래 신의주역과 (북중) 세관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북한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의 하나인 ‘채하시장’이 들어서 있던 곳인데 바로 이 곳에 시장을 옮기면서까지 새로 아파트를 짓게 된 것이다. ‘채하시장’은 남상동 공원부지로 옮겨졌다고 한다. 채하동 일대 아파트는 도내 외화벌이 회사들과 돈주들의 투자로 건설되는 것으로, 국가 기업소가 건설 허가를 받으면 돈주들이 돈을 대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신의주 채하동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로 신의주시 의학전문학교 기숙사나 친척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기로 결정됐다고 한다.²¹⁾

최근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켜지던 1가구 1주택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전해진다. 돈 있는 사람들이 남의 명의를 빌려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한 가구가 집 한 채씩 소유해야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에게 200~300달러를 주고 명의를 빌려 집을 구매하는데,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다주택 보유현상은 신의주와 남포, 함흥 등 북한의 주요 도시들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평양시는 예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평양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큰 집을 사서 멋있게 꾸려 되파는 현상이 있지만, 한 사람이 몇 채씩 보유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어떻게 단속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조심한다고 한다.²²⁾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 중엔 돈벌이와 사생활을 위해 불법적으로 여러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한다. 함경북도 회령시 당국이 조사한 결과, 2015년 2월 현재, 회령시에는 32세대의 화교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56채에 달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²³⁾

20) 『자유아시아방송』(2015. 10. 26).

21) 『데일리 NK』(2015. 1. 13).

22) 『자유아시아방송』(2015. 9. 11).

23) 『자유아시아방송』(2015. 2. 5).

국가 주택매매는 불법이지만 주택 거래 거간꾼들이 보안서와 도시경영사업소 간부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입사 허가증을 받아내 이러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주민들은 주택 거간꾼을 ‘데꼬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집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데꼬사장에게 우선 상담부터 받아야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 거간비는 아주 비쌌지만 현재는 판매가격의 10%로 일반화됐다. 주택매매가 위법이지만 데꼬사장에게 10%의 거간비만 주면 아무 문제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주택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²⁴⁾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각광 받는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서 주택가격이 꾸준히 올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매매는 돈주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례로 2010년에 1만 5천달러에 거래되던 신의주 역전동의 2칸짜리 아파트는 현재 3만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5년 사이에 두 배나 뛰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몇 채씩 장만해 두고 있다는 것²⁵⁾이다.²⁶⁾

4. 가내/소규모 수공업의 발달과 품질의 향상

최근 평양과 남포일대에서 생산된 이른바 ‘뿌쩍동복(푸틴 동복)’이라는 외투가 150~200달러에 팔리는데 주요 고객층은 노동당 간부들과 행정 간부들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부장동복’이라고 불리던 겨울 외투가 남성들의 눈을 사로잡았지만, 지금은 한 단계 고급스럽게 생산되어 현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을 달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 생산된 겨울용 외투가 상당히 고급스러워 중국인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무역업자들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길림성의 상인도 최근 북한에서 들여왔다는 오리털 솜옷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북한에서 제작된 솜옷 가격이 중국돈 400위안인데 비슷하게 만들어진 중국산에 비해 절반이나 싸고 질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만든 오리털 동복은 바느질 솜씨가 오히려 중국제보다 더 나아 보였다고 한다. 또한 평양 특권층 부인들 속에서 밍크외투가 ‘대세’인데 가격도 200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남포시의 한 재단사는 중국에서 인조 밍크 모피를 들여다가 집에서 정교하게 가공하는데, 외화상점에 내놓아도 결코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²⁷⁾

최근 북한에서는 국영기업이 만든 경공업 정품보다 이를 모방해서 개인들이 만든 모조품(짜

24) 『데일리 NK』(2015. 9. 9).

25) 『자유아시아방송』(2015. 5. 27).

26) 또한 이러한 부동산 투자바람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렸다는 내부 지침이 한 몫하고 있다는 게 북측의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신의주의 소식통은 “원수님(김정은)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출처를 따지지 말고, 아파트 건설에 투자하게 하고, 이윤도 최대한 보장해 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내부 지침이 북한의 공식문건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을 방문한 북측의 주민들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어 김 제1위원장이 실제로 이러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자유아시아방송[2015. 5. 27]).

27) 『자유아시아방송』(2015. 2. 6).

통)이 더 경쟁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국영기업이 제조한 제품의 수량이 적어 공급이 달라는데 기인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만든 모조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정품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공급되는 대표적인 국산품 중의 하나인 신의주 신발을 예로 들면 장마당에서 팔리고 있는 신의주 신발은 정품이 별로 없고 대부분 개인이 만든 짝통이라고 한다. 지난 9월 라선지역 홍수 복구현장 시찰 당시 김정은 제1비서가 신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던 신의주 운동화는 공장이 있는 신의주에서조차 정품보다는 개인이 만든 모조품이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의주 신발의 경우, 짝통이 정품보다 품질은 우수하면서 가격은 저렴해 주민들이 모조품인줄 알면서도 기꺼이 구매한다고 한다. 또한 신의주 봄향기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세숫비누와 세탁비누의 경우도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짝통인데 정품은 수량도 적을뿐더러 가격이 비싸 주민들이 짝통을 선호한다는 것이다.²⁸⁾

한편, 과거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이나 돈주들은 중국 저장성(浙江省) 등 인건비가 싼 지역에서 생산된 저가 소비품을 대량으로 수입해 북한 내부에 유통시켰다. 그러나 이런 저가 제품들은 오늘날 북한 주민들의 기호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한다.

중국을 드나드는 장사꾼들도 완제품보다는 북한에서 가공해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소재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종전에는 중국을 드나드는 장사꾼들이 장마당에서 바로 팔 수 있는 완제품들을 들여왔으나, 지금은 옷을 만드는 천이나 상표, 소규모 개인 영업자들로부터 주문 받은 전자부품과 오토바이부품 등을 주로 들여오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함흥에서 개인들이 제조하는 자전거, 오토바이 다야(타이어)는 중국산보다 값이 훨씬 비싸다며 기존에는 자동차도 운전자들이 직접 수리해야 했으나 지금은 돈만 내면 개인 수리소들에서 다 해준다고 한다.²⁹⁾

이처럼 북한의 개인 수공업자와 돈주들이 소비제품 생산, 즉 내수용 제조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게 된 것은 북한 시장화의 진화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공산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종합시장이 발달하고 국영상점도 개인들에게 임대 운영되면서 공산품 판매루트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씨비차' 등을 이용한 물류 이동이 개선되면서 '중국산 직수입'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³⁰⁾ 또한 수공업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산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었다. 아직은 제대로 판단하기 이르지만 북한에서도 시장화의 진전으로 수입 대체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28) 『자유아시아방송』(2015. 11. 20).

29) 『자유아시아방송』(2015. 11. 3).

30) 『데일리 NK』(2015. 10. 27).

5. 국영기업과 시장/돈주와의 연계성 확대

국영기업이 시장 또는 돈주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 다양하다. 가장 용이한 형태는 건물 임대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공장·기업소 간부들이 국가 소유의 기업소 건물을 돈주들에게 빌려주고 돈을 버는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 신규 설립되는 외화별이 기업 중 공장·기업소 책임간부들과 결탁해 건물 일부를 임대 받아 같은 건물 안에서 ‘동거살이식’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 종전에는 돈주들이 신규 부지를 승인 받아 건물을 새로 지어 기업을 운영했지만 최근에는 보다 저렴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기존 국가 건물 임대방식으로 기업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돈주들이 건물 임대를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종전에 외화별이 기업을 설립한 돈주들은 서로 건물 짓기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훗날 당국에 의해 강제로 건물을 빼앗겨 빈털터리로 나앉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기존 건물을 임시 이용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일부 간부들은 돈주들에게 직접 건물 임대 청탁을 받기도 하는데, 청탁 받은 도당(道黨) 간부들과 시, 군 인민위원회 처장급 간부들은 자기 관할 국영공장을 돌며, 돈주들에게 건물을 적극 주선해 주곤 한다. 이 과정에 이들 간부들은 돈주에게서 ‘내가 나서서 도와줬다’는 의미로 수천 달러의 현금을 받아 챙기기도 한다. 때문에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건물 면적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 면적은 점점 확장되고 있다. 공장 간부들은 기업 운영자금 확보를 구실로 저마다 건물 빌려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³¹⁾

최근에는 평안남도 순천에 위치한 ‘탄광기계공장’의 건물 일부가 개인 제조업자에게 임대된 사례가 알려졌다. 탄광기계공장의 건물 한 동이 신발을 만드는 돈주에게 임대되었는데 공장 건물 일부를 돈주에게 임대하여 ‘더벌이’를 실천하는 것은 공장 간부들에게도 이익이다. ‘더벌이’는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이 주어진 원료와 노동력을 이용해 국가계획목표를 달성하는 것 외에 수행하는 추가적인 수익활동을 가리킨다.

흔히 돈주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국영공장 건물을 임대해 생산시설을 갖추려는 이유는 ‘전기’ 때문이다. 신발 생산의 경우 압피와 중창은 개인들이 집에서 재봉기로도 만들 수 있지만, 신발 바닥창은 전기를 이용하는 설비가 필요하다. 돈주들은 대개 판매 이익의 30%를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한다고 한다.³²⁾

공장·기업소 간부들이 돈주들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는 신규 사업 공동 진출이다. 평안남도 순천화력발전소는 지난 2014년 폐열을 이용한 수영장과 목욕탕을

31) 『데일리 NK』(2015. 12. 22).
32) 『데일리 NK』(2015. 10. 27).

건설,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그 수익을 공장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수영장은 목욕탕과 한증탕, 식당과 매점을 비롯한 현대적인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어 손님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설을 짓기 위해 여러 명의 돈주들이 투자했다. 발전소 터빈에서 나오는 폐열이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돈주들이 폐열을 이용해 수영장과 한증탕을 건설하자고 제안해 이 건설의 사업이 추진됐다. 이 시설을 운영해 얻은 이윤은 화력발전소와 개인 돈주들이 각각 5대 5로 나누기로 했다고 한다. 국영기업소 간부들이 돈주와의 친분을 활용해 새로운 수익 사업을 공동으로 벌인 사례이다.³³⁾

III. 사유화 및 돈주의 동향

1. 운송수단의 사유화 확대

북한에서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선박, 광산, 상점, 식당, 공장, 편의봉사 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 최근 가장 활발한 분야의 하나가 운송수단이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 거점 도시에서 돈주가 운영하는 사설 운수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주요 도시에는 국영 ‘무궤도 전차 사업소’와 ‘면(장)거리 차 사업소’가 있지만 버스들의 노후화와 자금난, 석유 부족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그 대신 돈주들의 운송회사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돈주들은 돈을 투자해 차량(버스, 화물차)을 구입한 뒤 당국에게 일정한 돈을 상납하고 예컨대 평양(중앙) 소속 명칭의 운송회사를 차리고 있다. 내각 산하 ‘평양 운수무역회사’와 ‘평양 운수총국’은 개별 돈주들과 ‘경제 타산안’(허가서)을 작성하고 일정 정도의 이익을 상납 받는 조건으로 이들을 자신의 산하 기업으로 편입시키면서 운수업을 허가해 주고 있다. 각 지역에 있는 ‘평양 운수무역회사’와 ‘평양 운수총국’ 명칭의 버스회사들은 대부분 중앙 기관과 결탁해 운송업 허가를 받은 개인들의 회사인 것이다.³⁴⁾

평양시의 전력난으로 대중교통이 사실상 마비되자 ‘별이버스’라고 하는, 사실상 개인 소유의 시내버스가 대거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민간 버스가 국가의 공식 대중교통망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평양에서는 최근 전기가 없어 궤도 및 무궤도 전차가 다니지

33) 『데일리 NK』(2015. 3. 16).

34) 『데일리 NK』(2015. 3. 27).

않아 거리에는 별이버스들이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별이버스들은 보통 10인승에서 30인승짜리 버스들이 운행되고 있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을 맞추어 기존 무궤도 전차가 다니는 코스를 따라 돈다는 것이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실시로 공장과 기업소마다 독립채산제가 실시되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 보려고 궁리를 하고 있다.³⁵⁾

돈주들이 운영하는 시외버스도 계속 늘고 있다. KBS가 방영한 북한 내부 영상은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평성시의 시외버스터미널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넓은 공터에 수십 대의 시외버스가 서있으며, 각 노선별 거리와 요금에 대한 대형 안내 게시판까지 등장했다. 평성에서는 버스를 통해 전국의 모든 도와 연결되고 있으며, 노선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서 2013년 겨울 현재 평성 버스터미널에서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무려 49개 노선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³⁶⁾ 이처럼 여객 운수업이 급속히 성장해 북한 전역을 연결하는 장거리 시외버스 운영체계가 형성, 발전되고 있다.

최근의 개인 소유 운수사업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택시이다. 택시 수요가 늘면서 택시운전을 원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승용차를 구입해 사업소에 등록하는데, 대개 중국산 승용차의 매입가격은 5만위안 정도라고 한다. 청진시 송평구역에 위치한 ‘청진택시사업소’는 도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과 소속 여객운송사업소 산하기관으로 예전의 ‘해외동포운수대’와 합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사업소에는 ‘볼보’와 ‘라다’(러시아)와 같은 낡은 차들과 중국산 택시 2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³⁷⁾

최근 택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국제 승용차 수요가 늘고 있다. 북한은 2013년에도 중국 자동차업체 비야디의 F3 승용차 60대를 평양 시내에서 택시로 운행하기 위해 수입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어느 러시아 학자³⁸⁾는 평양에만 다섯 개 택시 회사가 성업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가 평양 시내의 전체 교통수단의 15~20%를 차지한다는 얘기를 북한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³⁹⁾

2. 개인 기업의 확대

북한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금 밀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개인들이 불법적으로 금을 채굴하는 ‘개인(금)광주’가 늘어나고 있다. 돈주들은 당국이 운영하는 국가 금광산의 일부 갱을 불법적으로 임대받거나 금광산 주변에 따로 갱을 파

35) 『자유아시아방송』(2015. 8. 14).
 36) KBS 파노라마 “김정은 2년, 북한은”(2014. 2. 14 방송).
 37) 『자유아시아방송』(2015. 12. 29).
 38) 알렉산더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학과 교수.
 39) 『자유아시아방송』(2015. 6. 1).

소규모의 금광산을 운영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함경북도의 경우, 청진시 청암구역 금바위동 주변에 있던 광산들은 이제 모두 개인의 소유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청암구역 금바위(토막동)에서 대서로 이어진 검은산 일대에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금광들이 골짜기마다 개발되었고 금바위동 ‘청암광산’은 도 보위부와 철도관리국, 보안서 등 여러 갱들로 나뉘어 개인 ‘광주’들에게 임대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청암광산’ 측은 임대해 준 ‘광주’들로부터 매달 일정량의 금을 거두어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광산 주변에는 개별적인 ‘광주’들이 불법적으로 금 채취를 위해 뚫은 소규모 갱들이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한다. 소규모 갱을 운영하는 돈주들에 고용된 주민들은 ‘광산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광주’라고 부른다고 한다. 하나의 갱에 보통 5~10명 정도의 인력이 고용되어 금을 채굴하고 있는데 ‘광주’들이 고용인들의 월급은 물론 금 밀매에 관한 보호비 명목으로 보안서에 바치는 뇌물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⁴⁰⁾

또한 함경북도 은덕군 일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돈주들에 의해 백여 개가 넘는 노천 채탄장들이 생겨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일당을 받기 위해 고용된 외지주민이 몰려들며 노천 탄광의 채탄권을 둘러싼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⁴¹⁾

아울러 장사하는 여자들을 위해 만든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설 탁아소와 유치원이 곳곳에서 성업 중이라고 한다. 젊은 여성들은 장마당에 나가기 전에 개인 탁아소에 아이들을 맡기는데, 탁아소 주인은 하루 10시간 이상 봐주는 대가로 쌀이나 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원산에서는 한 아이를 봐주는 데 한 달에 20달러 정도 받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8~10명 정도 돌보면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고 한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개인 탁아소를 없애라고 지시했지만, 워낙 수요가 많아 근절되지 않는다고 한다.⁴²⁾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체육대중화 방침에 편승해 개인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들이 크게 늘고 있다.⁴³⁾ 각 지역의 ‘공설운동장’에 등장한 오락형 체육시설부터 기업들에 세를 내고 운영하는 사설 체육시설들로서 청진경기장을 비롯해 수남, 청암, 신암, 송평구역들에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오락 시설들이 늘고 있다. 주로 이동식 시설들로 수류탄 던지기, 활쏘기, 창 던지기와 같은 간단한 국방 체육종목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라고 한다. 또한 예전에는 흔히 볼 수 없었던 탁구장이 곳곳에 생겨나고 배드민턴을 즐기는 젊은이들도 갈수록 늘고

40) 『자유아시아방송』(2015. 8. 4).

41) 『자유아시아방송』(2015. 7. 24).

42) 『자유아시아방송』(2015. 6. 25).

43) 한편, 북한 신문에 사설 체육학원의 광고가 실려 화제가 된 바 있다. 평양시 당위원회의 기관지인 『평양신문』은 2016년 1월 5일자 신문에 평양의 한 태권도 학원이 낸 것으로 보이는 ‘2016년 태권도 학원 학생 모집’ 광고를 실었다. 고급중학교(고등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광고는 같은 지면의 다른 기사와는 달리 분홍색 바탕 위에 굵은 글씨로 실려 있다. 광고에는 이단연차기 그림도 함께 들어가 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광고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기업소가 아닌 학원 광고가 실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연합뉴스 [2016. 1. 6]).

있다. 탁구장을 비롯한 개인체육시설의 경우, 대개 기관·기업소의 빈 공간을 대여해 수입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⁴⁴⁾

3. 사적 고용의 확대

사유화의 진전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사적 고용의 확대이다. 사적 고용의 확대는 달리 보면 노동시장의 발달이다. 물론 북한에서 사적 고용의 확대는 아직까지 대부분 비공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북한 도시 주민들이 겨울을 앞두고 월동준비에 본격 돌입하는 시기에는 구멍탄(구공탄)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주는 일공(일일 노동자)이 주민들의 각광을 받는다. 흥미로운 점은 권력층과 돈주는 물론 평범한 장사꾼들과 가정주부들도 일공을 채용해 구멍탄을 빚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고 생각한다. 종전에는 자신이 석탄을 구입해 구멍탄을 직접 만들어 온 주민들이 최근에는 구멍탄을 만들어 주는 일공을 고용하고 있다. 분탄에 진흙을 섞고 물에 섞어 구멍탄 기계로 찍는 일은 대체로 힘이 센 젊은 남성들이 하고, 분탄운반과 건조된 구멍탄을 (고용주)집 창고에 쌓아주는 일은 여성일공들이 하고, 10대 소년과 60대 노인들은 밤에 구멍탄 경비를 선다고 한다.⁴⁵⁾

최근 북한에서 돈 많은 부자들에게 머슴(일꾼)을 알선해 주는 인력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인력을 주선해 주고 돈을 받는 거간꾼들은 장부까지 만들어 알선한 ‘머슴’들을 관리하고 있다. 양강도 혜산시 ‘양강일보사’ 옆에서 압록강 주변 도로까지 길게 이어진 ‘인력시장’에서 젊은 남성 ‘꽃제비’들이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이 시장에 가면 소규모 장사꾼으로 위장한 ‘중매쟁이’들이 줄을 지어 있는데 이들을 찾아가면 필요한 인력을 언제든지 돈을 주고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중매쟁이’들은 일일 ‘잡부(잡일)’로부터 몇 년이라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 머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력시장’을 통해 고용된 ‘머슴’들은 먼저 30%의 알선료를 거간꾼들에게 바친다. 청진시의 경우 수남시장과 포항시장에 가면 전문 ‘꽃제비’들을 인력으로 파는 장사꾼 조직이 있다고 한다.⁴⁶⁾ 북한에서의 노동시장의 발달을 잘 보여주는 또다른 흥미로운 사례도 있다. 북한은 2015년에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 놓고 수만 명의 군인들과 지방에서 올라온 돌격대원들을 투입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당국이 생필품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돌격대원들이

44) 『자유아시아방송』(2015. 8. 20).

45) 『데일리 NK』(2015. 10. 13).

46) 『자유아시아방송』(2015. 6. 23).

공사장을 이탈해 돈을 벌러 개인집을 찾아다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돌격대원들은 ‘일한 것만큼 대가를 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공공연히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노동자들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개인 돈주들이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어느 북한 내부 소식통은 “중전에는 인력들에게 일을 시키고 식사만 제공했지만, 지금은 군인들도 일을 하고는 꼭 돈을 요구한다”면서 “조선(북한)에도 노동의 대가를 돈으로 계산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⁴⁷⁾

한편, 포전담당제 실시로 농촌에서도 사적 고용이 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⁴⁸⁾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제를 실시하자, 농촌에 인력수요가 급증하면서 도시 인력을 고용해 포전 농사를 짓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포전관리제를 실시하면서 농민들로 하여금 기본 시간에는 농장에 나가 일하게 하고, 부여 받은 포전 농사는 분조 내에서 사람들끼리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농사짓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보통 한 농가에서 1정보 가량 땅을 받았는데 여기에 텃밭과 개인 소토지까지 다 합하면 3정보 이상 땅을 소유한 집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많은 토지를 다루자면 어차피 사람이 필요하다. 게다가 2015년처럼 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협동농장 논밭에 나가 물주기에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전농사에 매달릴 시간이 없다. 따라서 농민들은 도시에서 ‘노력’을 데려와 활용한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 밥을 먹여 주고 재워 주고 일 시키고, 가을에 옥수수를 얼마간 준다는 것이다.⁴⁹⁾

4. 돈주의 역할 확대와 위상 제고

북한에서 돈주들은 애초 당과 군부, 내각 산하의 무역회사에 소속되어 원자재 수출과 중국으로부터 완제품 수입까지 도소매를 장악해 왔다. 또한 운수업과 사금융도 주도해 왔다. 게다가 지난 2012년 이후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힘입어 북한 돈주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역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공장·기업소에 대해 독립채산제에 기초한 경영자율권을 부여하고, 공장 자체적인 원료의 조달과 생산물 제조와 판매, 심지어 대외무역 권한까지 부여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건설업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평양시 거주 50대 남성인 대북소식지와 인터뷰에서 “돈주들이 없으면 국가건설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면서 “최근까지 공화국(북한)에서 건설된 대규모 전시성 사업도

47) 『자유아시아방송』(2015. 7. 25).

48) 또한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제’로 땅을 나누어주자 일손이 딸린 농민들이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농사일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포전담당제’ 시행 후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자유아시아방송[2015. 7. 28]).

49) 『자유아시아방송』(2015. 6. 24).

돈주들이 뒤에서 시멘트와 강재를 대고, 중국에서 건축자재를 들여다 장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시대에 평양 일대에 집중 건설된 창전거리아파트, 문수물놀이장 등도 이런 돈주에 의해 지어졌고, 결국 그것이 김정은의 업적으로 포장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정부가 국가건설과제를 내각, 당기관, 군대에 할당하면 이 곳 책임자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들에게 특혜를 약속하고 공사를 맡기고 있다고 한다. 이 돈주들은 공사가 끝나면 건물 사용권을 넘겨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계약을 맺고 있으며, 노력영웅 칭호와 훈장과 김정일, 김정은 표창장을 받는 식으로 사회적 명예도 획득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일환으로 김정은 정권이 실시하고 있는 협동농장의 분조관리제, 포전관리제도 돈주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다. 분조관리제, 포전관리제 실시 이후 돈주들이 농촌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⁵¹⁾ 함경남도의 어느 돈주는 2014년에 시당 조직비서와 짜고 농지 열다섯 정보를 빌려 농사지었는데, 본전 7천 500달러를 다 뽑고도 1만 5천달러를 손에 넣었다고 한다. 이 돈주는 한 정보에 약 500달러를 투자해 직접 농민을 고용해 밭갈이도 시키고, 충실한 종자를 사오고, 비료도 일반 농장보다 두 배 이상 투하해서 정보당 약 1천달러의 이윤을 올렸다는 것이다. 농촌에 투자하는 돈주들은 함경남도뿐 아니라 평안남도 등 다른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협동농장 토지를 빌리기보다는 공장·기업소가 관리하는 부업지 등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 그동안 여러 가지 행사와 계기를 통해 주민들의 충성자금 경쟁을 유도해 온 북한이 2015년 7월 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된 새로운 기부금제도를 비공개로 선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일성 사망일인 7월 8일을 앞두고 “김일성, 김정일 기부금을 제정함에 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비공개 결정이 채택되어 각 도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모든 주민들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그런데 함경북도 청진시만 해도 ‘김일성 기부금’과 ‘김정일 기부금’을 내고 ‘애국상장’을 받은 주민들이 벌써 여러 명 된다고 한다. 북한돈 3천만원을 기부하면 ‘상장’, 1억원을 기부하면 ‘애국상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전승절(7·27)을 맞으며 올해 혜산시에 건설되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내화 3천만원 이상을 낸 사람들에게 ‘상장’을, 1억원 이상을 낸 사람들에게 ‘애국상장’을 수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장 수여자들에게 별도로 휴대할 수 있는 ‘기부증’이 있어 상황에 따라 ‘기부증’만 보이면 웬만한 죄를 범해도 무마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고 한다.⁵²⁾ 부와 권력의 새로운 상징이 탄생한 것으로서 돈주들의 사회적

50) 『자유아시아방송』(2014. 12. 15).

51) 『자유아시아방송』(2015. 5. 11).

52) 『자유아시아방송』(2015. 8. 16).

입지가 한층 넓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IV. 시장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책

1. 매우 우호적인 정책기조

2015년 한 해 동안 시장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책기조는 단순한 허용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화폐개혁 이전과는 판이한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북한정부는 2009년 11월말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종합시장(장마당)에 대해 직접적인 폐쇄조치까지 시도했지만 물가폭등, 상품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겹잡을 수 없게 되자 2010년 5월부터 시장에 대한 억제정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다시 합법적인 존재로서의 지위를 회복했고 이러한 정책기조는 이후 계속 유지되었다. 즉, 2010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적어도 5년 반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북한정부는 시장에 대해 관용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용적 정책기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예 우호적인 성격으로 변모해 갔다.

물론 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단속, 통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북한은 당창건 70돌을 앞두고 2015년 8월 초, 공식 시장 이외의 골목장과 길거리장을 단속한다는 인민보안부 포고문을 발표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에 착수했다.⁵³⁾ 농촌동원이 일제히 시작되는 5월 초순부터 장마당 개장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⁵⁴⁾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단속과 통제는 2007년부터 2010년 초까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던, 시장화에 대한 전면적 단속 통제에 비할 바 아니었다. 2015년에 시장화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제한적, 일시적, 국지적인 것이었다. 후술하겠지만 북한정부는 2015년에 시장화에 대한 단속·통제는커녕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여러 정책을 전개했다.

2.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지속

시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2015년 정책기조를 허용을 넘어선, ‘촉진’ 또는 ‘활용’이라고

53) 『데일리 NK』(2015. 9. 16).

54) 『자유아시아방송』(2015. 5. 22).

평가할 수 있는 것은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시장화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시장을 일정 정도 합법화한 7·1 조치가 북한의 시장화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북한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7·1 조치와 마찬가지로 시장과 관련된 제반 불법적 또는 반(半)합법적 활동의 상당 부분을 합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에서 보았듯이 공장·기업소, 농장 등 개별 생산단위, 나아가 각 기관들의 시장경제활동 관련 자율성이 적지 않게 확대되었다.

여기서는 김정은 시대의 신년사에 대한 관찰을 통해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특징 하나를 추출해 보기로 하자.

김정은 시대의 신년사에서서는 2013년에 처음으로 ‘경제관리방법의 개선’ 문제가 등장했다.⁵⁵⁾ 다만, 당시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한다는 원칙하에서 경제관리방법의 개선, 완성을 추구한다는 입장의 제시에 그쳤다.

다음 해인 2014년에는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고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한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그런데 고전적, 전통적 표현인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한다는 원칙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 눈길을 끌었다. 그 대신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한다는, 이 또한 고전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한다는 표현보다는 다소 약한 표현이 등장했다.

이어 2015년에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등장했다.⁵⁶⁾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한다는 표현도,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한다는 표현도 사라져 주목을 받았다. 대신 “현실적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각급 당조직들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으로 강하게 밀어주어야 합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2016년에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등장했다. 다만,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했다. 또한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한다는 표현도,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한다는 언급도 여전히 없는 상태였다.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으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한 김정은 신년사의 문구상의 변화는

55) ‘경제관리’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용어로서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운영에 있어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도 문자 그대로 ‘경제관리’의 개선 조치이며, 또한 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도 우리식 ‘경제관리’의 방법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56)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이라는 표현이 『노동신문』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2013년 4월 2일자에서 이다.

<표 1> 김정은 시대(2013~16년) 신년사의 경제관리 개선 관련 문구

| 구분 | 문구 |
|--------------|---|
| 2013년 신년사 | 우리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 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생산활동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방법을 끊임 없이 개선하고 완성해 나가며 여러 단원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 2014년 신년사 |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당의 령도 밑에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 하고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
| 2015년 신년사 |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 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모든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으로 강하게 밀어주어야 합니다. |
| 2016년 신년사 |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 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전개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주: 음영 표시는 필자.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국가의 통일적 지도’의 일정 수준의 완화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조충련 기관지 『조선신보』(2015. 1. 8)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보도하면서 북한경제의 지향점이 ‘유연한 집단주의체제’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3. 생산수단 사적 소유에 대한 당국의 정책

북한의 시장화는 제도화의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긴 호흡에서 보면 북한정부의 정책이 시장화의 제도화 수준을 서서히 높여 주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일부는 완전 합법화(이른바 흰색의 영역)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불완전한 합법화(이른바 회색의 영역)의 정책이다.

예컨대 식당, 상점, 소규모 공장, 소규모 탄광, 버스 등 생산수단의 사실상의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특정 국가 기관 또는 국영기업의 산하로 편입시키되 개인 사업체로서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한다. 국가 명의를 대여해서, 즉 사회주의 모자를 씌워서 부분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대신 사실상의 세금을 수취한다. 또한 휴대전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생산수단의 성격도 띠고 있는 소비재에 대해 국가에 등록시키면서 사실상의 세금을 수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고,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공식경제의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개인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제도적 보호막을 확보하게 되고, 따라서 보다 안정적으로 시장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⁵⁷⁾

한편, 북한정부는 2015년 11월 초부터 ‘중앙당 검열대’라는 이름의 합동검열조를 각 지방에

내려 보내 개인들이 운영하는 영업소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계설비들을 모두 회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이 사전에 비밀리에 알려짐에 따라 개인 상공업자들이 서둘러 대피함으로써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검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운송수단을 노린 것 같은 분위기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운송수단 중에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발오토바이까지 모두 단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관·기업소 명의로 등록되어 매달 수익금을 바치는 개인 소유의 운송수단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⁵⁸⁾ 따라서 이번 조치는 개인영업을 하더라도 국가에 수익금의 일부를 바치지 않으면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민들에게 일깨워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북한정부의 정책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또한 오토바이의 개인 소유에 대한 북한정부의 최근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정부가 개인의 오토바이 소유권을 박탈한 것은 지난 2014년 7월이었다. 국가의 기름사정을 이유로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모두 회수해 직장과 기관재산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몰수했다. 그런데 북한정부가 2015년 11월 초부터 인민보안부를 통해 소유금지 해제를 통보했다. 대신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다.

함경북도의 경우, 인민보안부 산하 ‘군인상점’들에서 오토바이 판매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팔고 있는 오토바이 가격은 예전 시장가에 비해 훨씬 비싸지만 그 대신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군인상점’에서 판매되는 오토바이는 겉으로는 북한 제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산에 평양의 ‘보통강’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 것이라고 한다. 그 오토바이 가격은 현재 중국돈 9천위안으로 중국에서의 판매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이 오토바이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만 확실한 개인 소유 증서에다 등록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가 생략된다는 편리함과 등록과정에서 뇌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⁵⁹⁾

4. 손전화시장에 대한 당국의 정책

북한정부가 최근 손전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기본요금을 낮추는 정책까지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손전화시장은 북한정부가 독점적 공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새로 만든 시장으로서

57) 양문수, 「다시 한 번 속도를 내기 시작한 북한의 시장화」, 『한반도 포커스』, 2015년 7-8월호, 2015.

58) 『자유아시아방송』(2015. 11. 20).

59) 『자유아시아방송』(2015. 12. 24).

시장에 대한 최근 북한정부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2013년까지는 손전화의 한 달 기본요금이 중국돈 25위안 정도였는데 2014년부터 기본요금이 북한돈 1천원으로 종전의 30분의 1로 대폭 인하되었다. 기본요금만 내면 무료통화 4시간과 문자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통보문(메시지) 20개를 받는다. 손전화 요금이 기존보다 내려가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북한정부는 각 도별로 손전화 가입자 유치실적에 따라 표창을 주면서 가입자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북한에서 신형 손전화(스마트폰)는 중국돈 2천 5백위안 이상으로 돈 없는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싸지만 접이식(폴더폰)이나 밀기식(슬라이드폰)과 같은 구형 중고 손전화는 중국돈 300위안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화량이 많은 대부분의 권력층과 상인들은 외출(업무)용인 신형 손전화와 가정용인 구형 손전화를 각각 한 대씩, 한 사람이 두 대의 손전화를 사용하는데 손전화 두 대면 각각 기본요금으로 8시간 동안 무료통화를 할 수가 있어 비싼 추가요금을 피할 수 있다. 손전화의 기본요금이 많이 내려간데다 전화 사용량이 많은 사람들이 비싼 추가요금을 피하기 위해 손전화를 두 대씩 사용하면서 북한의 손전화 가입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⁶⁰⁾

한편, 북한정부는 자본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독점적 공급자의 횡포까지 자행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스마트폰, 즉 터치식 손전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체신당국이 여기에 계전기를 끼워 팔고 있다. 정전이 잦아지면서 주민들은 계전기가 필요 없게 되었지만, 당국은 사실상 계전기를 강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아리랑 손전화는 400달러씩 하는데, 거기에 30달러짜리 계전기를 끼워 팔면 모두 430달러가 된다. 북한이 당초 전기절약을 목적으로 계전기를 대량 생산했다가 잘 팔리지 않게 되자, 잘 팔리는 스마트 폰에 억지로 끼워 넣어 강매하고 있다는 것이다.⁶¹⁾

5. 조세·준조세 확대

북한정부가 최근 주민들의 소토지(불법적 개인경작지)에 대한 사용료를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낼 것을 지시하면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4년 ‘별거숭이(민동산)산 수림화’에 대한 김정은의 방침이 나오면서 소토지 사용료를 돈 대신 알곡으로 납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그런데 2014년에 소토지 1정보당 알곡 500kg을 납부했지만 2015년부터는 종전보다 250kg이나 많은 750kg을 바쳐야 한다는

60) 『자유아시아방송』(2015. 6. 30).

61) 『자유아시아방송』(2015. 3. 12).

것이다. 요컨대 소토지 사용료가 종전보다 50%나 오른 셈이다.⁶²⁾

김정은 제1비서가 2015년 전국의 도 소재지들에 대해 육아원과 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3월 11일 각 도당위원회들에 전국의 육아원과 초등학교를 최상의 수준으로 새로 지으라는 중앙의 지시가 하달되었다. 그런데 지시 관철을 위한 건설자금과 자재는 매 가정세대들에 부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각 도당위원회들은 매 시, 군, 구역별로 인민반을 통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은 물론, 노력까지도 세대별로 고루 나눠 부과했다고 한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경우 매 가구당 자갈모래 한 바께쓰(양동이)를 현물로 바쳐야 하며 건물의 창틀과 기와를 비롯한 자재구입 명목으로 각 동사무소들에서 가정세대들을 상대로 20위안씩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육아원과 초등학교 건설자재를 매 가정세대들에 부담시키자 가난한 주민들은 청진 바닷가와 수성천에 나가 모래자갈을 채취해 팔고 있다며 이들은 가정세대들에 부과된 과제를 돈벌이 기회로 여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⁶³⁾

또한 김정은 제1비서가 2015년 전국의 각 도마다 당 창건 기념 70돌까지 평양 애육원(고아원) 수준의 애육원을 의무적으로 하나씩 꾸리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 경우 중앙에서는 예산 한 푼 지원하지 않는다. 이 방침을 받은 각 도에서는 필요한 건설비용을 모든 기업소와 기관에 할당했고, 과제를 부여 받은 각 기관과 기업소에서는 또 다시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속 성원들에게 할당했다고 한다. 양강도의 어느 기업소에서는 노동자들에게 1인당 10달러를 바치라고 했다고 한다. 평안북도에서는 기업소뿐만 아니라 여맹(여성동맹)에서도 부녀자들에게 5달러씩 바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⁶⁴⁾

한편, 2015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 전으로 함경북도 청진시가 끝내야 할 건설과제는 포항구역 중심의 아파트 살림집이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서부터 이미 해체된 청진제강소 구간까지의 직선도로를 내고 양옆에 고층 살림집 아파트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현대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제로 거두었다고 한다. 거둔 돈은 구역마다 다른데 신암구역과 청암구역 도로 양 옆에 사는 주민들은 매 가구당 중국인민폐 300위안 정도씩 부담했다고 한다. 그 외 매 인민반들은 하루씩 돌아가며 건설자들의 식사를 맡아야 했다.⁶⁵⁾ 이처럼 각 지방마다 당 창건 70돌 기념일,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여러 과제 달성을 위한 비용을 주민들에게 할당하고 있다.

이렇듯 개별 단위 및 주민들에 대한 조세·준조세의 강화는 오히려 개별 단위 및 주민들의 시장화 관련 활동을 조장,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조세·준조세는 대부분 개별 단위

62) 『데일리 NK』(2015. 3. 15).
 63) 『자유아시아방송』(2015. 5. 3).
 64) 『자유아시아방송』(2015. 9. 30).
 65) 『자유아시아방송』(2015. 9. 29).

및 주민들의 ‘자력갱생’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이후, 나아가 7·1 조치 이후 ‘자력갱생’은 시장경제활동과 사실상 동의어로 되어 버렸다.

V. 맺음말에 대신하여: 향후 전망

2009년 화폐개혁으로 인해 물적·재정적 토대를 상실했던 북한의 시장화는 이미 오래 전에 그 충격에서 벗어났고, 더욱이 이제는 다시 한 번 탄력이 크게 붙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김정일 정권 말기 및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정책은 종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공식 제도 내에 편입시키면서 동시에 시장의 성장을 추동하고 있다.

시장화에 대한 북한정부의 태도 변화가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 종전에는 시장을 없애느냐 살리느냐가 최대 고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장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다. 북한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관리 가능한 시장화라면 관리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수준을 제고해 보는 것이다. 현재의 정책기조가 시장과의 타협이라면 타협의 범위를 더 넓히고 그 수준을 더 높여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정부는 당분간 시장화에 대해 현재의 활용·촉진 정책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장화에 대한 정책이 또다시 억제·통제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앞의 <표 1>에서 보았듯이 2016년 김정은 신년사에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즉,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대해 처음으로 ‘전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2012년부터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범적, 부분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를 앞으로는 보다 광범위하게,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어찌 되었든 2016년에도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최고 지도자가 분명히 밝힌 것이다. 따라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2012년 6월부터 최소한 4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이러한 개선조치의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시장화로서는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 만하다. 5월에 7차 당대회가 열리는 2016년 한 해만 놓고 본다면 시장화에 대한 현재의 정부 정책기조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